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안)

□ 추진배경

-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형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필요**
- ※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발표('23.6월)
- **행·재정지원체계 개선**으로 학교에 부과되는 **행정업무 감축**을 통해 **학교 자율성 강화**와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기여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많은 특수목적사업**으로 인해 **단위학교에 행정업무 유발**
-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195개) 중 **학교에서 운영되는 사업 수는 84개(43%)**로 **학교당 평균 4.8개 운영, 최대 13개 운영**('22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개요]

- ▶ (법적근거) 「교부금법」 제5조의2 :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 ▶ (재원) 내국세 20.79%×3%×60%
- ('22년) 1조 3,137억원 → ('23년) 1조 3,363억원 → ('24년안) 1조 2,010억원

- **교육청에서 학교에 교부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중 공립학교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비율**은 '21년 기준 55.48%('19년 52.00%, '20년 53.83%)
- 단위학교에서 접수되는 **홍보성 외부공문***이 **행정업무 유발 요인**으로 작용
- * **홍보성 외부공문 접수건수**('21년 354만건 → '22년 388만건 → '23.7월 236만건)
- **현재 10여개 교육청에서 외부공문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위학교의 **공문서 감축**하고 있으나, **단위학교 체감은 낮은 수준**

□ 개선방안

① 학교단위 지원사업 감축·폐지 등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개선

① 학교단위 지원사업 최소화

- **시범·선도학교 운영지원 축소, 유사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학교 단위에서 추진되는 사업 최소화**(핵심교육개혁과제 제외*)
- * 늘봄학교('23년 459개교), 디지털 교육혁신('23년 351개교) 등
- **통폐합, 시도교육청 이양, 지원중단** 등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시책 지원 사업 수 대폭 감축**('23년 166개 내역사업 → **'24년 30개 내외(세부내역사업)**)

② 사업 운영방식 변경(학교→교육청 등)

- **단순집행 성격의 사업** 등은 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수준에서 운영**되도록 **사업설계 및 교부단계에서 관리***
- * 시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 수준 운영을 전제로 사업비 교부
- **사업신청·결과보고·집행정산 시** 수반되는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강구
- * 예시) 집행잔액 학교회계 편입,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한 정산 등

③ 시도교육청 사업운영 자율성 확대(정책메뉴판 등)

- **교육부는 핵심 교육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정책메뉴판 방식**으로 특교사업을 **설계·제안**하고,
- **시도교육청(학교)에서 시도별 여건 및 특색에 따라 사업**을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 개편**

[국가시책사업 정책메뉴판(안)]

정책유형	재구조화 이후 사업유형			
공교육 경쟁력 제고 (8개 사업)	교과교육지원	교수학습 자료개발	창의융합교육	미래교육 체제구축
	교육전년 여건조성	교원역량강화	학부모교육	글로벌교육지원
국가책임 교육·돌봄 (4개 사업)	늘봄학교	유보통합·유아교육	특수교육	기초학력보장
디지털 교육혁신 (3개 사업)	디지털 역량 제고	디지털 기반 구축(새책캠프)	디지털 교과서 개발	
교육복지 지원 (2개 사업)	학생성장 통합지원		교육복지 기반확충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4개 사업)	학생안전	학생건강	학폭대응	양성평등 강화
진로·직업교육 (3개 사업)	직업교육	진로교육	진학지원	
행·재정지원 (4개 사업)	교차행정체계 구축	교육정보환경 지원	행정운영지원	재정운영지원

② 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학교회계 제도 개선

① 목적사업비 최소화 등 학교운영비 표준지원모형 마련·안내

- 시·도교육청별 공모사업 축소 등 목적사업비 최소화, 학교운영비 총액 확대 지원 등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표준적인 학교운영비 지원 모형” 마련 및 교육청 권고(~'23.12월)
- ※ 교육청 예산 부서를 중심으로 학교 대상 공모사업 예산편성 전 일괄 안내 및 무분별한 목적사업비 지원 제한 등 안내·유도

[학교회계 자율성 강화 우수사례]

- ▶ (충북) 학교회계 자율운영 연구학교(목적사업비 최소화, 학교운영비 총액 지원 등) 운영('23.~'24.)
- ▶ (경기) 교육현장 자율성 강화를 위한 목적사업비 재정운용 방식 개선 추진('23.9.~)
 - ①목적사업비 비중 축소 및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 확대, ②총액교부사업 확대 등
- ▶ (강원) 목적사업비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기본운영비 편성 확대
 - ①교육정책사업수 54개 축소·폐지, ②매년 반복 지원 목적사업비 학교운영비로 통합 전환 등
- ▶ (대전) 공립 학교운영비 통합 및 총액 배분 확대
 - ①목적사업비(고교학점제 등 16개) 학교운영비 통합 배분, ②공공요금 인상 등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② 시도교육청의 목적사업비 축소 유도

- (재정분석지표 반영) 시도교육청 재정분석 중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 지표에 정성평가 추가 및 배점 확대(10점 → 15점) 검토('24.上)
- (모니터링) 목적사업비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K-에듀파인 시스템에 반영하여 교육청별 목적사업비 비율 축소 유도 및 지속 점검('23.下)
-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중 목적사업비 현황(매월 또는 분기별), 월별 전입 현황(매월) 등
- (정보공유 활성화) 분기별 학교회계 운용 우수사례 발굴 및 교육청 간 정보 교류를 통한 우수사례 확산 지원
-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실 기능 추가(학교회계 메뉴) →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학교회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업무담당자 협의회·성과보고회 개최
- (목적사업비 감축에 따른 재정지원) 감축비율 및 우수사례 등 분석 결과에 따른 시도교육청 평가 및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법 검토('24.)
- ※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 수립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향상’ 지표 신설 검토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개정 필요(재정수요액 산정기준 개정 등) : 예시) 전년 대비 목적사업비 비율 감축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등

③ 단위학교 공동사무 수행을 위한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 시·도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학교지원 전담기구*(통합교육지원센터 등)의 안정적 운영·확산을 위한 법령개정(~'23.12월)
 - * 주로 시설관리(시설공사 지원, 기계·시설 보수, 냉난방기 청소, 조경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점차 학교 행정업무(교사호봉 재획정, 기간제(강사) 채용, 대체 인력풀 관리, 교복 및 교과서 구매 등) 분야로 업무범위 확대 중
- 학교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그 명칭, 조직·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전담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 범위의 확대 등을 위해 인력 재배치 등 활성화방안 마련('23.12.)
- 기존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지도·감독’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

④ 정보화시스템을 통한 행정지원 업무 효율화 지원

- 교육청에서 홍보성 문서로 분류할 경우 학교 문서접수함에 일괄 등록처리 및 공문 자동게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외부공문 관리기능 도입 추진
 - ※ (도입일정) 외부공문 관리기능 개발('23.8.~12.) → 서울교육청 시범운영('23.12월) → 17개 시·도교육청 적용('24.1월)
- 향후에도 시·도별 자체 운영 중인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업무경감 효과가 높은 기능이나 공동 활용 가능한 기능 등을 발굴하여, K-에듀파인 등을 통해 모든 시·도교육청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보완 추진

□ 추진일정(안)

- 2024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계획 수립('23.9월말)
- 표준적인 학교운영비 지원 모형 마련 및 안내('23.12월)
-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방안 마련('23.12월)
-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외부공문 관리기능 도입 및 적용('24.1월)